

[보도자료]

수 신 | 국제, 법조, 사회 담당 기자

발 신 | 2019.10.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담당

-겨레하나 정책국장 이하나 / 010-6584-2121 / leehana@gmail.com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 김영환 / 010-8402-1718 / yhkact@gmail.com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최용근 / 02-522-7284 / ykchoi@minbyun.or.kr

제 목 |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가해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오늘까지 피고 기업들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원고들의 노력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3. 작년 대법원의 판결이 담고 있는 뜻은 명확합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는 불법이었고, 식민지 조선인을 동원하여 강제노동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가해기업들의 책임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동하게 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치고 있는 파장이 있다면 그 책임은 식민지배를 한 일본정부와 인권침해를 가한 가해기업이 져야 합니다.

4. 이에 원고와 대리인단, 재판지원회, 시민사회는 한국 대법원 판결 1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일본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이 당한 인권피해와 지금도 일본정부와 기업이 반복하고 있는 가해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시간 : 2019년 10월 30일, 오후2시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서초동)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1.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에 관한 설명

- 김기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2. 일본 강제동원 강제노동 국제사회(ILO) 고발을 위한 100만 시민서명운동

- 엄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 추가제소 현황보고

- 최용근 (민변 강제동원사건공동대리인단)

4. 피해자 발언

- 이춘식 (일본제철 원고), 양금덕 (미쓰비시 원고)

5. 질의응답

- 김세은 (기존소송 진행, 절차 등에 대한 답변)

※ 첨부자료 현장배포